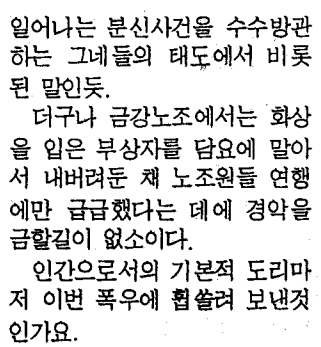




을이다.

정부는 좋았다. 있는 사람들(대청하나 외제차 타고 홀로치러 다니는) 돈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지하철이나 버스 단골)을 위해 쓰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제동이 걸렸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마당에 세금을 한꺼번에 엄청난 비율로 올릴 수 있느냐는 차 있는 사람들(특히 중형)의 항변이 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말도 일리가 있다. 정부보유를 보면 소형승용차는 11%, 중형은 60%, 대형은 80%씩 올라가는 것이다. 물가를 한자리로 잡았다고 공인한 마당에 아무리 견본이 좋더라도 수십%씩 올린다는 건 소비권의단 생각한 형조이다. 더우기 1~2백만원짜리 중고 중형승용차

의 1년분 자동차세가 시가 50%짜리 아파트 재산세와 같다는 건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

사실 그렇다. 그러나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중등주택으로 에너지 비상이 걸렸다. 에너지과소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꼬리에 꼬리를 문 승용차 때문이다.

출퇴근길 거리를 뚫는 승용차는 대부분 한사람 내지 두사람이 타고 있다. 한사람 단건 오프도라이버고 두사람 단건 기사가 있어 때문이다. 기를 소비를 줄이지는데도 승용차 행렬은 막무가내로 꼬리를 문다. 차가 막히니 기름이 더 들고 일부 계층의 편한함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덩달아 고통

을 당한다.

아름은 여론이 들끓자 민자당은 정부안에 조세저항을 부를 소지가 있다며 사흘만에 인상을 재조정을 슬그머니 폭우속에 밀어넣었다.

국군의 날, 한글날 휴일철회 번복소동의 비롯이 재연된 것이다. 법안을 발표하기전 반발여론이 없어 좋은 명분을 살리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했으며, 한반 내용은건 일부 계층이 반발한다고 금방 말을 빠지랴고 명분을 남득시키고 싶었기였어야 했다. 대형 외제차에 세금 올린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哲〉

— 156 —